

임예진 FTA관세특례법(2022년 대비) 개정사항

p.23 : (3), (4) 신설 / (6) 수정 / 보충 수정

(3)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수입자는 상기 (1) 또는 (2)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세관장은 상기 (3)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

- ① 상기 (1) 또는 (2)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①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보충 관세법 준용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p.29 : 4.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라오스 상공회의소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 ①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 ②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캄보디아 상무부
- ③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인도네시아 통상부
- ④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 ⑤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 ⑥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미얀마 상무부
- ⑦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필리핀 세관
- ⑧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세관
- ⑨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태국 상무부
- 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베트남 산업무역부
- ⑪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암기식 개정 전	암기식 개정 후
외 · 상 · 통 · 공 · 국 · 상 · 세 · 세 · 상 · 산	재 · 상 · 통 · 공산 · 국 · 상 · 세 · 세 · 상 · 산

p.30 : 7.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7.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율발급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
· 서명한 것

p.36 : 1. ④의 ㉠, ㉡ 신설

- 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p.38 : 7. ②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정정발급의 경우 :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38 : 9.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9.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p.49 : 2. 단서 신설

2. 서류제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 및 ④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p.51 : 9. ① 수정

9. 인증취소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 ㉠ 법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한 경우

p.53 : 2. 단서 신설

2. 서류제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 및 ④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p.58 : 1. 2.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1. 부족세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2. 과다세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p.67 : 5. (2) 수정

(2) 조사 결과와 결정 내용에 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p.122 : 2. (1) 수정

(1) 의의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 ① 통관 절차의 간소화
- ②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 ③ 세관기술의 지원
- ④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 제1항 제1호(기관발급)에 따라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 ⑤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 ㉢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 ㉥ 그 밖에 상기 1. (1)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p.140 : 2. 삭제

2. 관세청장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 삭제

p.143 : 2. ① 수정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